엔비디아 372조 공급망 흔들리나… K-반도체·부품 '촉각'

젠슨 황 퇴진에 공급업체 관계 변수
일론 머스크 "개인적 신뢰 바탕 핵심 공급망 계약 일부 잃을 수도"
삼성전기, 반도체 패키지기판 계약
앰코테크놀로지, 13억弗 규모 체결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2회 국제 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전기 부스에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 퇴진 이후 엔비디아의 공급망 투자 지속 여부가 국내 반도체·부품업체의 신규 수주와 설비 증설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지난 7월 기준 반도체 공급 및 생산능력 확보 약정은 2790억 달러(약 372조원)로 직전 분기 1190억달러(약 159조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2670억달러(약 356조원)는 2029년 초까지 이행할 공급계약 관련 금액이다. 다만 일부 약정은 확정 발주 이전에 취소하거나 납기 등을 조정할 수 있어 향후 발주 계획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황 전 CEO의 퇴진에 따른 공급업체와의 관계 변화도 변수로 제기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황 전 CEO가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확보한 핵심 공급망 계약 일부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엔비디아는 황 전 CEO 사임 발표 당시 기존 고객사와의 계약과 제품 개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엔비디아의 공급계약이 실제 조정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신규 수주와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기는 지난달 엔비디아와 다년간 반도체 패키지기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세종·부산 사업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 공급 물량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전체 기판 생산능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해외 업체도 발주 물량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반도체 패키징업체 앰코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와 13억달러(약 1조 7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2028년 말까지 국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사 선급금으로 투자 부담을 줄였지만, 추가 발주가 축소되면 증설한 시설의 가동률과 투자금 회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까지 둔화될 경우 국내 메모리업체도 수요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콜레트 크레스 임시 CEO 체제에서 AI 기업 투자와 데이터센터 금융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원이 축소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증설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신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산 물량이 경쟁사로 분산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새로운 수주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용 HBM 공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 14곳과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의 계약 물량은 2027년~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이다. 일부 계약에는 선급금 등 구매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결국 국내 반도체·부품업계는 엔비디아의 신규 발주와 AI 투자 규모가 향후 증설 계획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후임 경영진의 공급망 투자 및 금융지원 기조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황 전 CEO 퇴진 이후에도 엔비디아와의 공급계약이나 증설 계획에 변경 사항은 없다"며 "계약상 보호 장치는 통상 관련 조항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최교진 "AI 활용 부정행위 때 응시자격 최대 10년 박탈"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 추진
시험장용 전파기기 탐지기 등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시 응시자격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수험장에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AI 스마트 안경 대응 방안을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전날(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관련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최 장관은 "부정행위 예방을 강화하겠다. 지난 7월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물품에 포함했고 관련 내용을 반복해서 안내했다"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알리고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 앞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스마트 안경 착용 행위 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 응시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나아가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고, 제한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부정행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의심 행위 감독 요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기기 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도 수능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교육위 전체회의 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선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제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린다.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도 요청드린다. 불안을 조장하기 보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AI 기기 어떻게 잡나" 與野 한목소리 우려

與野 "근본적 방지 대책 시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6일 여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근본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최대 10년간 박탈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수험장 배치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여야 의원들은 감독 인력이 육안에 의존해서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우려를 쏟아냈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수능에서 적용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 등 의료용 디바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3일 남은 상황에서 (정확한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사용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AI 기기를 활용한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능은 물론 국가시험에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시험 등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태홍 기자

교육부 "수능 연기 고려 안 해"… 신종 부정행위 대응책 검토

AI 안경 이어 초소형 카메라 논란
최교진 장관, 시험장 현장 점검
감독관 유의 사항 보완 등 대응 논의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 논란 속에서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되자 선을 긋는 한편,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맞춘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두고 시험장을 찾아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5분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준비 상황을 살폈다.

이번 수능은 오는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 대책'에 따라 전국 시험장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치를 마쳤다.

올해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시험장에 판별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까지 불거졌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험장 내 전자기기 통제와 적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능을 연기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입시·교육 유튜버 미미미누는 구체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면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 "수능 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연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능 연기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남은 기간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롭게 드러난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추가 조치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독관 유의 사항을 보완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